

## 안전보건에 불평등이란 단어는 없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우리의 삶은 분명 이전보다 나아졌고, 각종 수치와 지표는 선진국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가면에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평등한 사회이지만, 저마다의 가슴팍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 달리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한 차이와 불평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도 예외일 수 없다. 스스로는 선택한 적 없지만, 사회가 만든 계단 위에서 노동자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 작은 사업장일수록 위험은 더 커지는 현실

우리나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수는 국내 전체 노동자 10명 중 6~7명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인구가 작은 사업장에서 땀 흘리지만, 안전보건은 오히려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는 828명으로, 그중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동 정책은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됐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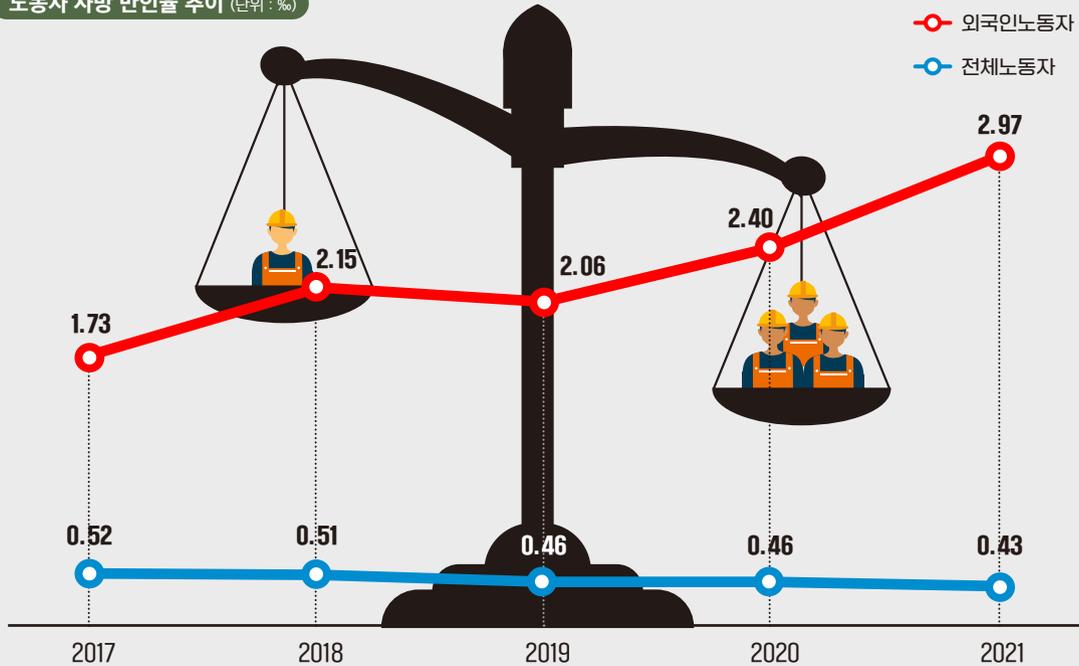
정책에서 예외 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2022년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명목 아래 2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법이 적용돼야 하던 2024년 1월, 이상하게도 같은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영세 사업장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고려했을 때 2년은 짧은 기간이라는 것. 그렇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그동안의 기간은 짧지 않다는 것인가. 단편적이지만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안전보건 현실을 대변한다.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재해 현황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자 사망 만인을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 급변하는 노동환경, 시야도 넓혀야 할 때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환경 또한 과거와 달라졌지만, 우리 사회는 넓어진 사각지대를 비추지 못한다. 외국인노동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86만 명대였던 외국인노동자는 2023년 92만 명대까지 급격히 증가했다.(불법체류 제외) 그러나 이들의 자리는 여전히 사회적 안전망 바깥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중(사망 만인율)을 조사한 결과, 2017년 1.73%이었던 수치는 2021년 2.97%까지 상승했다. 같은 해 국내 전체 노동자의 사망 만인율이 0.43%인 것과 비교하면 그 수는 더욱 커 보인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대책도 시급하다. 플랫폼노동의 대표적 직군인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를 살펴봤을 때 그들은 2021년 기준 국내 임금노동자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보다 14시간가량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외·야간노동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 고객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건강 스트레스도 상당한 편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기 전까지 기본적인 안전망인 산재보험 가입조차 버거웠으며, 지금도 여전히 전체 플랫폼노동자의 절반인 100만 명 정도는 산재보험 가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위 언급된 노동자들을 누군가는 '취약노동자'라 부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취약한 노동자란 없다. 작은 곳에서 일해도 출신과 노동형태가 달라 노동의 가치는 동일하며, 그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